

# News & News

News  
& News

##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본지와 소통”

봉사기사 발굴·주2회 차별화 등 의견 다양  
공보위원회 첫 회의

치의신보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공보위원의 활동을 강화하는 방안이 긍정적으로 논의됐다.

치협 공보위원회(위원장 김홍석)는 7월 18일 치협 회관에서 첫 회의를 열고 ▲치의신보 모니터링 방안의 건 ▲지면개편에 대한 의견 논의의 건 ▲불법 네트워크 치과 기사에 대한 조언 및 의견수렴의 건 등 본지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보위원들이 적극적으로 신문에 대한 의견을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에 공보위원회와 본지가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달라는 의견이 나왔다. 또 모니터링 서식을 마련해 정기적으로 체크하는 방안도 검토됐다.

아울러 치과기사 인력수급에 대한 여론 환기, 학술 기사 강화, 봉사 관련 기사 발굴, 스마트폰 어플 개발, e-book과 PDF 신문 다시보기 흥보, 짧은 회원 포옹, 월오페션과 목요판의 차별화 등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

또 불법 네트워크 치과에 대한 기사뿐만 아니라 현행법상 명백한 불법인 사무장병원에 대한 취재를 강화해 관계 당국의 인터뷰 등을 통해 문제를 제기하고 적극 대처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최남섭 부회장은 “어려운 시기에 치협 위원을 맡게 되신 것 같다. 치과계가 최대 시련을 맞고 있다는 위기 의식을 갖고 회무에 임하고 있다. 그렇지만 최근의 상황을 통해 회원들이 단합할 수 있는 계기는 된 것 같다”며 “단합을 하면 안 되는 일이 없다고 확신을 하고 있다. 여러분들의 고견과 기坦없는 조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홍석 공보이사는 “언론의 객관성과 협회 회무를 홍보하는 기관지로서의 역할을 조화롭게 수행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본지에 대한 비판과 격려는 신문을 제작하는 힘이 된다. 위원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치의신보 회무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News  
& News

## “보조인력 수급 개원가 체감 총력”

치과보조인력개발특위

치협 치과보조인력개발특별위원회(위원장 맹명호·이하 특위)는 7월 12일 초도위원회를 열어 위원간 상견례 및 위촉장 수여식을 갖고 항후 치과계 보조인력 수급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특위는 맹명호 원장이 위원장, 이성우 치무이사가 간사를 맡았으며 10명의 개원가 및 공직 출신 위원으로 구성됐다.

이날 초도위원회에서 위원들은 치과전문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치과보건간호과 운영방안, 치과위생사 유휴인력 교육 등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검토, 논의하면서 항후 위원회 사업 방향에 대한 고견을 나눴다.

위원들은 특히 치과위생사 유휴인력 활용과 관련해 현재 전국 93개 치위생과에서 1년에 5000여명이 졸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취업률은 40~50%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원인 파악과 이들의 취업을 유도할 수 있는 대안이 절실히라는 데 공감했다.

이에 개원가 보조인력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으로 치위 협과 공동 취업 사이트 개설, 고용계약서 강화 등 다양한 방안이 제시됐다. 현재까지 배출된 치위생사는 5만여명에 달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치과위생사 인력은 2만2000명 수준으로 전체의 45%도 못 미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배출된 인원

의 수도권 편중도 문제로 지적됐다.

실제 최근 대전보건대의 조사결과 100명 졸업 후 90명 이상이 서울로 취업하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수도권 내에서도 대형치과병원이나 네트워크 치과로의 취업 편중 현상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에 위원들은 치과위생사 유휴인력을 일선으로 끌어내기 위한 사업과 더불어 치과간호조무사의 효율적 양성 방안 등 치과계 보조인력난 수급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맹명호 위원장은 “개원가 일선에서 보조인력으로 인한 회원들의 고충이 심각하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치과조무사 양성 사업 등이 추진됐지만 실제 이들을 취업 현장으로 나오게 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 제도가 아무리 좋더라도 실질적인 결과가 없으면 아무소용이 없다”면서 “특위가 회원들이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앞으로 많은 노력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홍순호 부회장은 “지난 5월 1일 집행부 출범직후 취임식도 없이 불법 네트워크 치과 척결에 전력을 다하다보니 초도 회의가 다소 늦어진 감이 없지 않다”면서 “전쟁 중이라도 해도 치과계 주요 현안들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특위차원에서 보조인력 수급에 더 관심을 가지고 실질적인 정책들을 수립하는데 힘써 달라”고 강조했다.

News  
& News

## 치협, 공보의법 통과 지원사격 이낙연 의원 발의 '지지 성명' 발표

최근 이낙연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공중보건의사에 관한 법률안(이하 공보의법)'에 대해 치협이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밝혔다.

치협은 7월 19일 성명서를 통해 "공중보건의사들의 오랜 숙원 중 하나인 공보의법 제정을 환영한다"며 "이 법안이 시행되면 공중보건의사의 관리·감독의 주체를 보건복지부로 일원화해 공중보건의사의 명확한 신분 보장과 자자체의 과도한 월권 행위를 근절하는 등 공공 보건의료 인력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 구강보건의료 향상에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치협은 성명서를 통해 현재 공중보건의사제도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과 매년 개정되는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의해 운영돼 급변하는 사회의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공익수의사, 공익법무관 등 유사한 전문직군이 단독법에 의해 적절한 처우를 보장받는 대체복무를 하고 있는 반면 공중보

건의사들은 신분을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며 자자체의 과도한 관리·감독 하에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해 공보의법 제정의 당위성을 뒷받침했다.

이낙연 의원이 6월 22일 대표발의 한 공보의법에는 공중보건의사의 신분 규정을 명확히 해 공무원의 직급 구조에 맞춘 대우를 보장하고 있으며, 관리책임 및 지휘·감독의 권한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해 근무지역 및 배치기관 지정의 공정성과 복무환경 개선을 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치협은 이번 성명서 발표와 함께 공보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가능한 지원과 활동을 한다는 방침이다.

송민호 치협 군무이사는 "공보의법과 관련한 주요 국회의원 및 보건복지부 관계자를 만나 법률안 국회 통과를 위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이번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 후배 치과의사들이 안정된 지원과 자격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News  
& News

## 협회지, 콘텐츠 다양화 모색 편집위원회 회의

대한치과의사협회지(이하 협회지)가 한국연구재단 등재를 목표로 콘텐츠 다양화 추진에 더욱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협회지편집위원회(위원장 신제원·이하 위원회)는 7월 20일 협회 대회의실에서 상견례를 겸한 첫 회의를 열고 협회지 콘텐츠 강화를 위한 다양화를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현재 매월 발행되고 있는 협회지의 경우 지난 2007년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학술지에 선정된 이래 계속 평가를 받아오고 있으며, 등재학술지로의 선정을 위해 준비 중이다.

이날 위원회는 올해 한국연구재단 학술지평가와 관련해 자체평가서를 중심으로 논의를 갖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 보완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위원회는 위원회 위원을 추가로 보강기로 하는 등 협회

지 콘텐츠 강화 등에 대해 더욱 박차를 가할 방침이며, 차기 회의에서 콘텐츠 개발 및 다양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에 대해 신중히 논의키로 했다.

이밖에도 위원회는 협회지에 논문개재율을 높리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고 우수논문 시상제도 등을 마련해 많은 논문들이 투고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나가기로 했으며, 또한 분과학회 등과도 협조해 학술대회 등에서 발표된 임상내용들도 심의를 통해 게재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김철환 위원장은 "협회지는 치협을 대표하는 학술지인 만큼 회원들에게 보다 많은 학술 및 임상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콘텐츠 강화에 노력해 나갈 것이며, 아울러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로 선정되는데도 힘써 나갈 것"이라며 위원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했다.